

한국인의 경제적 성격과 한국경제학 연구방법론*

전택수**

| | |
|------------------------------|-----------------------|
| I. 서론 | V. 행동가정과 이념적 인간형과의 관계 |
| II. 경제학 분석에서의 인간성 문제의 역사적 배경 | VI. 한국인의 사회경제적 성격 분석 |
| III. 인간의 행동동기와 이기심 | VII. 새로운 한국경제 분석모형 모색 |
| IV. 인간의 인지능력과 합리성 | VIII. 결론 |

I. 서론

19세기 말 이후 확립된 신고전과 경제학은 보편성과 역사성 그리고 구조성을 중시하였던 고전과 경제학에서 보편성만을 이어 받았다. 그 결과 신고전과 경제학은 모든 경제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연과학적 방법을 기본 도구로 삼았다.¹⁾

* 본 논문은 1998년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과제를 기획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경제학

1) W. A. Jackson, "Cultural Materialism and Institutional Economics," *Review of Social Economy* Vol. 5, No. 2, Summer, (1996)의 pp. 224~225 및 전택수, 『경제발전과 문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121~122쪽 참조. 여기서 신고전과 경제학을 구체적으로 명기했지만 신케인즈학과를 비롯하여 소비함수, 투자함수, 화폐수요함수 등의 모형을 활용하는 현대 주류 경제학은 전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은 A. Sen이 말하는 경제학에 대한 공학적(engineering) 견해에 해당되며 경제학에 대한 윤리적(ethics-related) 견해에 대립되는 것이다. A. Sen, *On Ethics and Economic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1996, pp. 2~7 참조.

마치 Newton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자연의 움직임에 대한 단순화 가정을 부과해서 분석 모형을 구축했듯이 신고전과 경제학자들도 개인의 행동에 대해 엄격한 가정을 세워 경제현상의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려 하였다. 그 가정이란 모든 개인은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思考가 시장경제원리의 근본이 되었으면서 오늘날 서구 선진국의 경제학계를 지배하는 주류경제학의 터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분석법을 기초로 하여 지난 40여 년간 한국경제가 이룩한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학자들은 한국경제의 특수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H. Kahn(1979)은 한국이 비전형적인 경제정책을, R. Lucas(1993)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모방할 수 없는 산업정책을, 그리고 Krause(1995)은 한국식(a Korean way) 산업정책을 채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Rodrik(1996)은 국민의 교육수준과 민간의 지대추구 행위 억제 등을 주요한 성공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한국경제를 설명할 수 있는 특수한 분석 모형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한국인의 경제적 성격의 특수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합리성에 기초한 분석법은 앞으로의 전망, 경제정책의 구축, 그리고 제도 개혁 등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국민의 정부’는 제2건국을 위한 국정개혁 6대 과제중의 하나로 ‘민주적 시장경제’의 확립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보편적인 세계의 기준이므로 병행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여 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유보적이다.

경제제도의 개혁이 쉽지 않다는 점은 D. North(1991)에 의해 명확히 지적되고 있다. 그는 새로이 도입하는 법이나 제도가 그 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괴리될 때에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그의 경고를 한국경제의 장래에 적용하면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인의 경제적 성격을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특히 각자의 경제활동은 외부의 충격(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에 대한 경제적 반응 및 대응으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²⁾

2) 케인즈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경제활동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면서 경제분석에 있어서 소비성향, 투자의 한계효율, 그리고 유동성선호 등의 3대 기본심리법칙의 중요성을 제

따라서 한국경제에 적용될 시장경제원리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식과 차이가 없겠지만 한국인의 경제적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에서는 상당히 변형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경제를 설명할 수 있는 특수한 분석법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는 국가의 경제에도 잘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를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인의 경제적 성격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³⁾

먼저 제2장에서는 경제학 분석에서 인간성에 대한 단순화 가정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보고, 3장과 4장에서는 경제학에서의 인간성 문제를 행동가정 (behavioral assumptions)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행동동기와 인지능력에 대해 각각 논의하기로 한다. 제5장에서는 각각의 행동가정에 따른 이념형적 인간을 구분하고, 제6장은 5장에서 정리된 모형을 기초로 한국인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규명하고, 제7장에서는 이를 기초로 한국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학 분석법을 제안한다. 마지막 8장에서는 요약과 함께 한국경제 정책에 주는 함의를 결론으로 제시한다.

II. 경제학 분석에서의 인간성 문제의 역사적 배경

모든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수많은 종류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러한 결정은 각자의 가치관과 주변의 현재적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⁴⁾ 각자의 가치관은 어릴 때부터 익혀온 경험이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제한적인 특수성을 갖는다. 어린이는 부모, 친구, 친척, 학교 나아가 일반 사회로부터 문화의 가치나 관습을 배운다. 이어 각자는 성인이 되면서 모

시했다. 정운찬, 『거시경제이론』, 다산출판사 (1991), 430쪽 참조.

- 3) 인간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본성과 사회적 역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경험적인 사실이다. 인간의 본성은 심리학에서, 그리고 사회적 역학은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 잘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와 관련한 인간 본성 문제에 관심을 둘 것이며 경제와 사회적 역학의 관계에 관해서는 전택수, 『한국의 국공채와 국민소득의 장기적 관계에 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집(1998); 전택수,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보인 전통문화의 역할』, 경제학연구 제46집 제2호, 한국경제학회(1998)를 참조할 것.
- 4) 현재적 사실은 한정된 자원, 생산기술, 생산물의 가격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류경제학의 주요 관심사이다.

든 의사결정의 기준인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또한 각 세대에 있어서 후손에게 자신의 문화를 물려준다. 이렇게 볼 때 세대간에 전달되는 많은 문화적 가치는 본질상 경제적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근로, 지출, 저축, 위험, 그리고 분배 등에 대한 태도나 행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경제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한 A. Smith는 인간의 행동동기에 있어서 이기적 본성과 이타적 본성을 대립 없이 조화롭게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기심과 이타심은 개인이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천성이며 본능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선악의 구별이 없다. 다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원의 획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기심에 따르는 경제활동을 인정하고, 신려(prudence)의 덕으로 그 행위의 덕성을 시인하고 있다. 그는 선이나 악이나의 판단은 그 작용이 인간의 사회활동에 있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다.⁵⁾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경제 생활은 사회생활에 깊숙이 배태되어 있어서 그 사회의 관습, 도덕, 그리고 습관을 통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인간행동은 문화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다.⁶⁾

경제학에서의 인간성에 대한 논의는 A. Marshall에 이르기까지도 중요시되었다. 그는 『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Economics)』에서 경제학을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활동하는 인간에 대한 연구’로 정의하면서 인간성(human nature)의 문제를 인간행동의 조건과 동기와 관련해서 곳곳에 언급하면서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런데 L. Walras부터는 경제분석에서 인간성의 문제가 경시되기 시작하였다⁷⁾. 그는 『순수 경제학 요론(Elements of Pure Economics)』에서 Newton이 우주를 이해하는데 동원했던 방법론을 경제적 현상의 분석에 적용하였는데 이때부터 인간성

5) 쿤태일, 아담 스미스의 윤리 및 경제사상체계에 관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7), 73~74쪽 참조.

6) A. Smith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Jerry Muller, *Adam Smith in His Time and Ours*, New York, The Free Press, 1992의 *Adam Smith in His Time and Ours*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M. Granovetter, and R. Swedberg, *The Sociology of Economic Life*,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1992, p. 9 및 K. Polanyi, “The Economy as Instituted Process,” in M. Granovetter, 1957; R. Swedberg (eds), *The Sociology of Economic Life*,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1992. 등에 의하면 모든 경제 활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표시이므로 경제는 제도화된 과정(instituted process)이면서 사회에 배태된(embedded)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7) Shlomo Maital, *Minds, Markets, and Money*, New York, Basic Books, Inc., 1982, pp. 14~15.

의 문제가 경제학으로부터 사라졌다.⁸⁾ 경제학의 원천을 윤리적 접근과 공학적 접근으로 나누는 Sen의 생각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을 중시하는 부류를 윤리적 접근에, 인간을 무심한 하나의 원자로 보는 Walras적 접근을 공학적 접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 후자는 현재 주류경제학 분석방법의 기초가 되고 있다.⁹⁾

공학적 접근의 대표로는 M. Friedman의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스스로 Walras를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¹⁰⁾ Friedman(1953)은 “실증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직 관찰되지 않은 현상에 대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이나 가설을 개발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유효한 이론이 반드시 가정의 현실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복잡한 현상 속에서 결정적인 요소만을 의미 있도록 추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에 의하면 문화와 역사에서 생성되는 가치관이나 태도는 논리적이고도 일관된 추론을 제공하지 못하나, 합리성이나 추론에 기초하는 논리는 일관성 있는 특성을 가지므로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가치를 질서정연한 선호체계로 변환시킬 수 있게 된다. 이 접근 방법은 경제활동의 주체중의 하나인 개인의 행동동기를 단순화하여 개인은 합리적인 이기심을 추구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윤리적, 도덕적, 습관적 동기 등을 모두 사상하고 있다.

한편, Sen이 말하는 윤리적 접근에 해당되는 연구들도 대단히 많다.¹¹⁾ W. A. Lewis는 A. Smith류의 질문인 ‘무엇이 국부를 결정하는가’에 대해 국민적 에너지(national energy)라고 답하면서 인간성에 대한 중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경제성장은 노동, 부, 검약, 혁신, 자식, 외국인, 모험 등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으며, 그 태도는 인간성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깊은 샘으로부터 흘러나온다.”¹²⁾ 그리고 James M. Buchanan(1994)은 윤리나 도덕이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경제활동에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근로윤리를 통해 근면은 덕이면서 사회적으로 바

8) 당시에 Walras와 사상적 궤를 같이 하는 학자들로는 William Petty, F. Quesnay, D. Ricardo, A. Cournot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것은 *ibid.*, pp. 14~15 참조할 수 있다.

9) Sen, *op.cit.* 1996, p. 2~3.

10) “We curtsy to Marshall, but we walk with Walras.” *ibid.*, p. 15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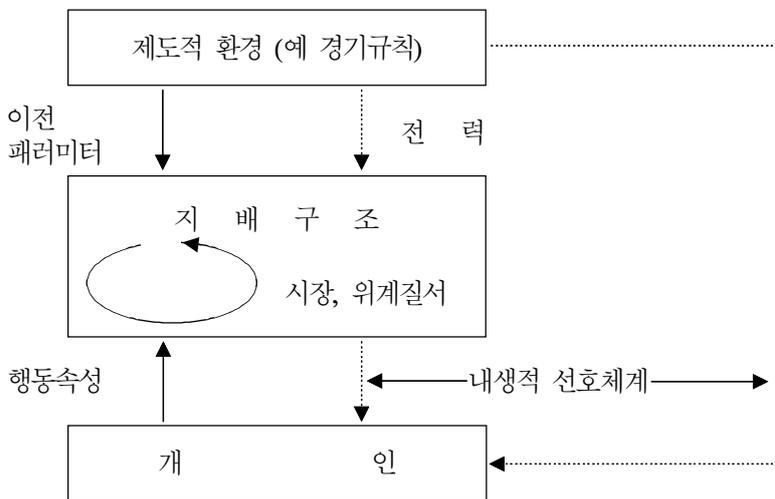
11) 관련 문헌은 Sen, *op.cit.*, 1996, pp. 16~17의 주석 12)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12) W. A. Lewis, *op.cit.*, 1955, p. 14.

람직하고 태만은 부도덕하여 사회적으로 지탄받는다고 인식한다면 서로서로 근로 시간을 늘여 시장의 확대를 초래하고, 이는 모두의 복지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즉 경제활동에 대한 윤리적 제약은 경제의 외부성을 초래하여 신고전파적 모형에 서보다 더 큰 복지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¹³⁾

이들과는 달리 경제적 문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최근에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소위 신중상주의자로 불리는 Alice Amsden이나 Laura Tyson 등은 지난 수십년 간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유교 문화적 인성에서 찾으려고 하였다.¹⁴⁾ 그리고 Herbert Simon은 “우리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의제를 설정하고 연구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본성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O. Williamson(1985, 1996)은 우리는 자원을

<그림 1> 인간성과 제도의 관계



13) James M. Buchanan, *Ethics and Economic Progress*,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4, pp. 5-30 참조. 그는 저축에 대한 윤리적 교훈도 마찬가지로 논리를 통해 외부성을 초래함을 보였으며, 사회는 이러한 윤리적 교훈의 원천인 성직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제2장 및 3장 참조).

14) Francis Fukuyama, *Trust*, New York, Free Press, 1995, pp. 13-21 참조.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조직할 수 있는 지배구조(governance)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장 현실적인 인간성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에게 기회주의적 요소가 빈발한다면, 기회주의에 대한 진실한 접근이 장래에 대한 예측을 증대시키며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¹⁵⁾

O. Williamson(1985, 1996)은 계약관계의 지배구조를 기초로 하는 거래비용경제학을 확립하는데 현실에 바탕을 둔 행동가정을 제시하였다. 지배구조에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이들의 상대적 효과성은 제도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과 경제활동가의 속성에 의존한다고 보고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도표를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이상에서처럼 이념형으로서의 인간성 모형이 경제학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결국은 다음의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의 행동 동기이고, 둘째는 인간의 인지 능력이다. 전자는 개인이 무슨 이유로 생산이나 교환, 혹은 분배 등의 경제활동에 참가하는지를 규정한다. 즉 자신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인지 혹은 도덕적 명령에 의해서인지 등이다. 그리고 후자는 특정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터인데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를 추론하는 능력을 규정한다. 그래서 이 양자에 대한 가정이 어떠한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인간형이 형성될 수 있다.

III. 인간의 행동동기와 이기심

인간의 행동동기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도에 따라 가장 강력한 형태인 기회주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기심, 그리고 타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타심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⁶⁾

15) O. Williamson, *The Mechanisms of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222~225 참조

16) 이하는 O. Williamson,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New York, The Free Press, 1985, pp. 47~52, 64~67을 주로 참조하였으나 그는 이타심 대신에 중립적인 형태인 규범 복종(obedience 혹은 rule-following)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기심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1. 기회주의

O. Williamson은 기회주의를 간교하게 사리를 추구하는 행동(*self-interest seeking with guile*)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⁷⁾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불완전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상대방을 오도하고, 왜곡하며, 위장하거나 혼란시키며, 혹은 혼동시키려는 제반 계산된 노력을 포함한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개인이 항상 그리고 어디서나 기회주의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일부의 개인들이 가끔 이기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며 그것도 드러내 놓고 사전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이 기회주의적 속성은 경제거래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찍이 **Niccolo Machiavelli**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다루어야 한다면, 기회주의적인 인간을 다루는데 있어서 상호 호혜적인 기회주의나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하였다.¹⁸⁾

기회주의적 속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폭넓게 퍼지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말할 수 있다. 경제활동에서 정보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정보는 중요한 상품으로 인식되어 정보시장이 존재하며 정보 전문가도 양산되고 있다. 그래서 상호간의 정보 차이는 더욱 커다란 경제적 가치를 초래하게 된다.

정보는 일단 공개되면 타인에 의해 값싸게 이용될 수 있으므로 공공재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서 개인들은 사적 정보(*privately held information*)를 과소 생산한다. 그래서 정보를 사고 파는 시장 혹은 거래에 있어서 정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시장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성질의 시장 실패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의해 발생한다. 이 양자의 행동은 보험산업에서 일찍이 나타나던 것으로서 공히 기회주의적 행동의 대표적인 현상이면서 자원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초래한다.

도덕적 해이는 거래당사자중의 하나가 거래와 관련하여 우월적인 정보를 가지

이타심을 내세우는 일반 문헌의 사례를 따르기로 한다.

17) *ibid.*, p. 64.

18) *ibid.*, pp. 47~49 참조.

고 있고, 그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래 성질을 변형시키는 행동을 말한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려면 거래에서 생기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발생해야만 한다. 이런 행위는 의사, 변호사, 자동차 수리공 등과 같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빈발한다. 이에 비해 역선택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양의 위험회피 수단을 구입하는 경향을 말한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개인은 병원의 검진을 받지 않고서 필요 이상의 보험을 구입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사전적으로 병원 검진의 결과에 따라 더 높은 보험수가를 지불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므로 건강한 사람에게 위험이 이전되어 건강한 사람이 보험에 덜 가입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에게 손해를 초래한다. 보험의 구입자는 자신에 대해 보험회사보다 항상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¹⁹⁾

기회주의 가정은 여러 가지 경제적 의미를 갖는다. 기회주의적인 개인은 신뢰와 선의를 믿는 개인을 이용하고 착취할 수 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신뢰성과 선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조직은 매우 취약하게 된다. 실제로 신뢰성과 선의를 가지지 않은 소수의 구성원들이 선의를 바탕으로 한 조직 즉 고상한 사회를 악용하게 되면 그 조직은 쉽사리 허물어지게 되며, 특히 그 소수가 사회적으로 격리되지 않고 또 처벌받지 않으면 그 조직은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2. 이기심

George Stigler(1975)는 “공통적 신려(prudence)의 원리가 모든 개인의 행동을 항상 지배한 것은 아니라 해도 모든 계층의 행동과 질서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A. Smith의 말로부터 이기심이 모든 개인들을 지배한다고 해석했다.²⁰⁾ A. Smith에 의하면 이기심과 이타심은 개인이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천

19) Richard Lipsey and Paul Courant, Economics, New York, Haper Collins Publishers Inc, 1995, pp. 368-370 참조.

20) “Although the principles of common prudence do not always govern the conduct of every individual, they always influence that of the majority of every class or order.” George Stigler, Smith’s Travel on the Ship of the State, in Skinner and Wilson (eds), Essays on Adam Smith,

성이며 본능이므로, 그 자체는 선악의 구별이 없다. 다만 인간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원의 획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기심에 따르는 경제활동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²¹⁾ 특히 **Smith**의 시대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초기자본주의가 시작된 때이므로 이기심에 따르는 경제활동만이 국민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었고, 또한 자연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A. Smith가 경제분석에서 이기심을 왜 도입하였는가를 논리적인 이유와 경험적인 이유로 구분할 수 있다.²²⁾

먼저 논리적인 이유를 보면 **A. Smith**는 이기심을 그의 가치론의 확립과정에서 도입하였다. 그는 모든 상품의 가치는 그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기본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런데 문명사회에서는 상품의 가치가 생산이 아니라 교환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발견하고서는 이 교환가치에 입각한 시장가격을 노동가치에 입각한 자연가격에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를 해명하려 노력하였다. 그 대답으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메커니즘을 제시했다. 개인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으려는 이기심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며,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고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심을 얻기 위해 부를 축적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²³⁾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자연적 충동 때문에 이기적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경험적인 이유는 후세의 학자들에 의해 자주 인용되는 정육업자의 의도에 의해 잘 설명된다.²⁴⁾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양조장, 그리고 제빵업자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고 스스로의 이익에 대한 그들 자신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애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애심에 호소하면 된다.”

Oxford, Clarendon Press, 1975, p. 237 참조.

21) 쿤태일, 앞의 글, (1987), 73~74쪽 참조.

22) 이하에서는 이기심에 대한 **A. Smith**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지만 그가 인간행동에서 발견되는 이타심도 아울러 강조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는 『도덕감정론(1790)』에서 오히려 동감(*sympathy*)을 이용하여 기근과 빈곤의 문제를 분석하였으며 이기심과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A. Sen**, op.cit. 1996, pp. 22~28 참조.

23) **Wilk**, *Economies and Cultures*, Oxford, Westview Press, 1996, pp. 46~47 참조.

24) **A.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Reprinted R. in **H. Campbell** and **A. S. Skinner** (eds), Oxford, Clarendon Press, 1776, pp. 26~27 참조.

이상의 논리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이유를 기초로 A. Smith는 자본주의경제를 중상주의경제와 구분 짓게 한 분업은 이기심에 기초한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교환 하려는 성향’ 때문에 발생하였고,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인간의 능력 차이도 이기심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교환의 매개수단인 화폐는 교환비율을 결정 하는 과정에서 ‘사려 깊은 사람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그리고 일국의 경제발전은 자신의 이기심에 따라 절약하려는 보통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²⁵⁾

Sen(1996)에 의하면 행동가정으로서의 이기심은 실증적인 증거와는 무관하고 예상되는 결과 즉 효율성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현재 자유시장경제 제도가 성공 하였다 해서 행동가정으로서 이기심이 지지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적 의무감, 충성심, 선의 등은 산업사회를 달성하는데 대단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일본 사회는 이기심과 거리가 멀다 하겠다. Michio Morishima가 말하는 일본 정신은 단순한 이기심 가정에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3. 이타심

이타심은 자신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한 이유로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 려는 마음을 말한다. 혹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이익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는 행동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타인의 이익에 도 움이 되도록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과로 자신의 이익이 감소되더라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 자 연성은 유전자에 부호화되어 있고 사회화를 통해 깨우쳐진다. 그래서 T. Tsukahara(1996)에 의하면 대표적인 인간은 타인이나 공동체에 유익하고도 협동 적인 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T. Tsukahara(1996)는 이타적 행동에 대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²⁶⁾

우선 이타심을 선의나 좋은 생각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고 행동을 유발해야 한 다. 둘째로, 행동의 목적은 타인의 복지를 증진 시켜야 한다. 타인의 복지가 고려

25) 권태일, 앞의 글, 92~115쪽 참조.

26) T. Tsukahara, “Love, Filial Piety, and Economic Ration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Conference Paper, 1996, pp. 6~7 참조.

되지 않는다던가 자신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부차적으로 고려되면 이런 행동은 이타적이 아니다. 셋째로, 의도가 결과보다 중요시되어야 한다. 타인을 위해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불리하든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초기 의도의 이타심은 감소되지 않는다. 넷째로, 나의 행동은 나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가능성을 동반해야 한다. 즉 나의 복지와 타인의 복지를 동시에 증대시키는 행위는 이타적이라 말할 수 없다.

한편, O. Williamson(1985)은 순종(obedience)을 이타심의 일종으로 보았다. 이것은 국가 목표와 완전히 동일시하는 관리들이 계획경제의 처방을 수행하는 유일체적 집단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이기심이 완전히 제거된 집사직(stewardship)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유토피아 사회에서나 있음직 하다. 이 경우 경제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쉽사리 해결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이타심이 발생하는 원인을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²⁷⁾

첫째는 상호적 이타심(reciprocal altruism)이다.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대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면 상대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리라는 기대에서 출발한다. 이는 윤리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이타심과는 거리가 있다.

둘째는 사회적 책임감이다. 집단선택이론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단순한 감정이나 윤리 의식에서 출발한다. H. Simon(1972)이 말하는 사회규율에 대한 순응(docility)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는 학습이나 모방이다. 즉 습관적인 모방으로서 이타적인 집단내의 후손들이 이기적 집단내의 구성원들 보다 더 이타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습관적으로 단순히 모방된 이타심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곧 소멸되기 쉽다.

넷째는 이타심 그 자체가 자신의 효용을 증대시켜 준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불리하지만 평생소득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부자지간처럼 경제적 거래자들이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면 이타심의 외부성 효과가 높아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안전성이다. 일반적인 인간은 고립되어 있을 때보다는 집단을 이루고 있을 때 더 안전감을 느낀다. 즉 고난에 닥쳤을 때 혼자 있는 것 보다

27) 민대홍, 『비합리적 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5), 13-16쪽 참조

다수와 같이 있을 때 두려움을 덜 느낄 것이다. 집단의 형성은 서로 양보하고 나아가 때로는 조직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할 때 가능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IV. 인간의 인지능력과 합리성

인지능력(cognitive competence)이란 인간이 얼마만큼의 정보를 수집·정리·분석·평가하는가, 얼마만큼의 대안적인 선택지를 고려하는가, 얼마만큼의 계산 능력을 갖는가 등을 포함한다. 인간의 인지능력이 어느 수준인지는 인간의 선택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가정중의 하나이다. 가장 강한 형태는 무제한적 합리성(unbounded rationality)으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적 합리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가장 약한 형태는 유기적 합리성(organic rationality)으로 나눌 수 있다.²⁸⁾

1. 개인적 합리성

Max Weber는 행동의 동기를 기초로 하여 사회적 행위를 목적 합리적 행위, 가치 합리적 행위, 감정적 행위, 전통적 행위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한 개인의 행위가 전통적 행위처럼 사려 없이 행해지며, 감정적 행위처럼 감정에 의해 행해지면 비합리적이라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사려있게 행동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합리적이라 말할 수 있다. 이 합리성 개념을 규정하는데 여섯 가지의 요소가 있다. 첫째는 행위자의 의식적인 의도를 나타내는 목적 관념이다. 둘째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계산 가능성이다. 셋째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개인에 의한 통제성이다. 넷째는 내적 일관성을 이룬다는 논리성이다. 다섯째는 일반적 규칙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이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이라는 관념을 내포하는 것이다.²⁹⁾

28) O. Williamson, op.cit., 1985, pp. 44~47 참조.

29) 조용찬, 『Max Weber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8), 11~18쪽 참조.

H. Simon(1972)은 사회적 행위에 대한 이상의 합리성 개념을 경제활동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즉 합리성은 기존의 제약조건들이 부과한 범위 내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행동 양식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표준적인 경제이론에서는 합리적인 행동을 어떻게 특징 지우는가. A. Sen은 합리적인 행동의 내용으로 선택의 내적 일관성과 사리의 극대화를 지적하고 있다.³⁰⁾

선택의 내적 일관성은 수단과 목표의 일치를 의미하며 개인이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바와 그가 실제로 행하는 바가 서로 일치함을 말한다. 이는 실제 선택지들의 집합을 이원 관계(binary relation)에 따른 극대화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원 관계는 완전히 이행적이며 나아가서는 수치함수에 의해 표시되어야 한다는 가정이 요구된다. 효용함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A. Sen에 의하면 관찰된 선택지 집합에서의 일관성도 선택지들과 선택에 외부적인 요인들 즉 선호체계의 성질, 목표, 가치, 행동동기 등에 대한 해석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말하기 어렵다. 한편 사리 극대화는 개인이 취하는 선택과 그의 사리 사이에 외부적 일치성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해석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류 경제학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O. Williamson(1985)이나 H. Simon(1972)은 이상의 두 개념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서 극대화(maximization)를 합리성으로 정의하였다. 소비자 행동이론에서 효용 극대화나 기업이론에서 이윤극대화로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특히 기업이론에서 수요함수는 총수입을 결정하고 이것이 비용함수와 함께 총 이윤을 결정하며 나아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규정한다. 두 함수와 관련되는 각종 제약이나 조건들은 경제행위자들의 환경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각 경제행위자들은 이들 제약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보유하며 필요한 계산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뿐만 아니라 최적에 도달하기 위한 한계조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합리성 가정은 인간의 인지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H. Simon(1972)은 인간의 인지능력에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한계가

30) A. Sen, op.cit. 1996, pp. 12~22.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실제 생활에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인간이 수요함수나 비용함수 등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그 변수들의 확률분포를 안다고 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둘째, 경제행위자들은 여러 대안들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보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극대화의 해법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발견과정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비용함수나 기타 환경적 제약조건에 복잡성(complexity)을 부가하면 경제행위자들은 최선의 해법을 계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그는 제한적 합리성을 제안하고 있다.³¹⁾

2. 제한적 합리성

제한적 합리성은 경제행위자들이 합리적 결정을 내리고자 의도적(intendedly)으로 노력하나 그 결과는 한정적(limitedly)으로 합리적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처음 제시한 H. Simon은 현실적인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인지능력의 불완전성에서 출발하고 있다.³²⁾ 이 정의에서 ‘의도적’ 부분은 절약하려는 경향을 설명하며 ‘한정적’ 부분은 인지능력의 유한성을 의미한다. 인간의 마음도 희소자원으로서 유한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인지능력을 제약하는 요인들 중에는 사회생활에서 물려받는 감정이나 사회적 규범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개인적 합리성에 대한 제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제한적 합리성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강조하는 G. Becker(1993)도 “본인의 연구는 때로는 합리성을 지나치게 가정하였다”고 하면서 인간의 행동은 소득, 시간, 불완전한 기억과 계산

31) H. Simon, “Theories of Bounded Rationality,” in C. B. McGeove and R. Radner, (eds), *Decision and Organization*, North Holland, 1972, pp. 161~164은 체스게임에서 나타나는 한계점들을 지적하면서 이상의 현상들이 실세계에서의 문제해결에서도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였고, John Conlisk, “Why Bounded Rationa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4, 1996, p. 670는 심리학과 실험 경제학 연구에서 발견된 관련 내용들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J. March, “Bounded Rationality, Ambiguity, and the Engineering of Choice”, *Bell Journal of Economics*, 9, 1978, pp. 587~608는 문학과 철학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다른 형태의 다섯 가지 인지적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32) O. Williamson, op.cit., 1996, p. 56을 참조.

능력, 그리고 기타 제한적인 자원들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실토한 바 있다.

John Conlisk(1996)는 실증적인 증거, 성공 사례, 그리고 자원의 희소성 등 때문에 경제이론에서 제한적 합리성을 도입하도록 강조했다.

심리학이나 실험경제학의 연구에서 제한적 합리성을 지지하는 실증적인 증거가 많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추론상의 오류를 광범하게 범하고 있으며 그 오류의 성질이나 크기가 속고비용, 유인동기, 그리고 경험 등과 같은 경제적 조건에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 행동, 기대 형성, 자산가격의 변동 행태, 실험적 경매나 게임 등에서도 완전한 합리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제한적 합리성을 고려한 모델로 경제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과 조직을 성공적으로 설명한 신제도학과 모형, 진화론적 경제학, 마음의 경제학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인지능력을 희소한 자원으로 다루는 제한적 합리성은 자원의 희소성을 다루는 학문으로서의 경제학 정신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인지능력이 희소하다는 것은 속고비용의 존재를 의미하며, 이를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이 우월하다는 것이다. 속고비용에는 거래를 계획하고 적용하며 감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한다.

제한적 합리성을 경제화 하는 데에는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일반 개인들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인지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견적 문제해법(heuristic problem-solving)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심리학자나 인지과학자들에 의해 심층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H. Simon은 이런 연구를 기초로 만족화(satisficing) 모형을 도입하여 실제 생활에서 개인들이 항상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였다.³³⁾ 개인들은 인식능력, 주관적인 감정, 불완전한 정보 등 때문에 최적화를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며, 오히려 최소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부합되는 전략을 실행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개인들은 선택 상황에서 대안들을 찾아내야 한다거나 아니면 대안들이 무수히 많을 때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33) 만족화(satisficing)는 Scotland말로써 영어의 satisfying(만족화)을 의미하는데 이는 H. Simon, op.cit., 1972, p. 118~120에 잘 설명되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전부를 탐색하는 규칙인데, 이는 기존의 정통 경제이론에서 채택되고 있다. 둘째는 만족스런 대안이 발견되면 이를 선택하고 탐색과정을 중단하는 규칙이다. 후자에 있어서처럼 모든 대안을 전부 고려하지 않는다면 만족스런 대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Simon은 심리학에서 이용되는 포부수준(level of aspiration)을 그 기준으로 채택했다. 그래서 이 만족화 원리에 의하면 탐색은 각자 혹은 각 조직의 포부수준을 만족시키는 대안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되고 일단 발견되면 그 대안은 채택되고서 추가적인 탐색은 중단된다.

그리고 O. Williamson(1985, 1996)은 추가적인 탐색을 중단하는 기준으로서 고전과의 최적화(maximization) 대신에 개선가능성(remediability)을 제시하고서, 후자가 제한적인 인지능력이라는 현실에 부합된다고 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발생할 때 각각에 적합한 즉 효과성이 높은 지배구조는 선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신제도학과 경제학의 한 부분인 거래비용 경제학(transactions cost economics)의 기초가 되고 있다.

합리성의 파수꾼으로 자처하는 정통경제학자들은 개념상의 혼동과 경제적 예측 능력이라는 점에서 제한적 합리성 모형을 비판한다. 개념적으로 볼 때 제한적 합리성은 불합리성 혹은 비합리성에 불과한 것으로서 독립적인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³⁴⁾ 그리고 제한적 합리성은 다른 형태의 비합리성이 될 뿐더러 더 큰 오류를 초래할 것이라고 정통경제학자들은 주장한다.

3. 유기적 합리성

O. Williamson(1985)에 의하면 유기적 합리성(organic rationality)은 가장 약한 형태의 합리성 개념으로서 현대 진화론적 경제학이나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의 기초이다. 유기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은 사회적 산물이어서 개개인의 본질적 특성은 다른 실체와의 관계의 결과이다. 그래서 인간성은 불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쾌락주의적인 것은 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일찍이

34) O. Williamson, op.cit., 1985, p. 45 참조

Veblen이나 Commons 등의 구제도학파에 의해 주장되었다.³⁵⁾ 이들은 실제로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본능, 습관, 관행, 주먹구구식 의사결정, 관습, 규범 등에 따라 행동하는 실증적인 발견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들은 불확실성과 환경적 복잡성 때문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이상의 사례들은 그런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한 적응적인(adaptive) 반응이다.³⁶⁾

원초적 상태는 유기체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기체의 특성을 감안하면 적응적 반응의 기본은 감정(emotion)이라 말할 수 있다. H. Simon이 지적하듯이 감성은 외부로부터 오는 충동이나 과거 경험에 의해 축적된 기억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³⁷⁾ 그래서 충동을 느끼거나 어떤 사건에 의해 특정 기억을 되살리면 우리는 감성의 요소들 즉, 공포, 분노, 슬픔, 그리고 기쁨 등을 느끼게 되고 이들 감성의 요소가 우리의 관심을 특정 사건 혹은 상황에 붙잡아 둔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의사결정을 부당하게 재촉하거나 결정 과정에서 예측되는 결과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잡을 경우 감성은 이성과 서로 배치된다.³⁸⁾

감성이 지배하는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수반하기 마련이다.³⁹⁾

첫째, 감성적 결정은 신속하지만 깊이 없는 반응이다. 감성적 정신은 신속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겨를도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그래서 감성은 위험을 탐지하는 레이더와 같은 기능을 보이므로 위급한 상황 아래에서는

35) Hodgson, "The Return of Institutional Economics," in Smelser and Swedberg (eds), *The Handbook of Economic Sociolog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 61~64.

36) Victor Vanberg, *Rules and Choice in Economics*, New York, Routledge, 1994, p. 18은 감성에 기반을 둔 행동을 준칙추종 행동(rule-following behavior)이라 부르면서 다른 대안들 보다 유의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Herbert A. Simon, *Administrative Behavior*, New York, The Free Press, 1996, chap. 4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보였는데 관습이나 습관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되는 귀중한 시간과 정성을 절약해준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제한적 합리성에 포함시켰다. Conlisk, op.cit., 1996, pp. 676~677도 유기체적 합리성을 제한적 합리성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37) H. Simon, op.cit., 1996, p. 90.

38) H. Simon, op.cit., 1996, p. 91은 내재적으로 그리고 항상 감성과 이성이 서로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감성은 우리의 관심을 특정 목표로 돌리면서 사고의 강력한 힘을 목표의 해결에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이성의 작용을 도와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39) Golman, Daniel, *Emotional Intelligence*(1995), 황태호(역), 『감성지능(하)』, 211~222쪽 참조.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성이란 불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불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종종 오류나 착각으로 직결될 수 있다.

둘째, 감성적 결정은 우선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경향을 갖는다. 감성적 상황 아래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충동은 머리에 앞서 가슴으로부터 먼저 발발한다. 이것은 결렬한 감정의 형태를 취하므로 언제 분출할 지 모르고 순식간에 정신을 지배하며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감성적 결정은 자기 확산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신념을 헤치는 기억이나 사실은 억누르거나 무시하고 자기 위안적인 기억이나 사실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성은 나름대로의 인식 체계와 방어막을 갖고 있는 자기 합리화 정신을 보인다.

V. 행동가정과 이념적 인간형과의 관계

이상에서 구축된 경제학적 인간성 문제에 비추어 각 학문 분야에서 채용하는 이념형으로서의 인간형을 범주적으로 해부·정리할 수 있다.

정통경제학에서 채택되고 있는 경제인은 행동동기로서는 이기심을, 그리고 인지 능력으로서의 완전한 합리성을 보유하는 존재로 해석된다. 경제인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리를 추구하는 인간형으로 묘사된다. 또한 경제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도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그중 어떤 수단이 최선의 성과를 가져다주는지를 계산해낼 수 있는 완전한 개인으로 묘사된다.

이에 대해 경제학 내부나 인접 학문은 현실적 부합성이라는 면에서 비판을 제기한다. 철학, 사회학, 인류학 등에서 제기되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인간은 조직을 위하거나(사회학적 비판) 타인을 위한다(인류학 및 도덕철학적 비판)는 의미에서 이타적이며, 관습과 조건화의 창조물이라는 의미에서 비논리적 혹은 불합리적이거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경제학 내부의 비주류인 신제도학파는 주류경제학이 너무 이상적인 인간성을 가정했다고 비판한다. 실제의 인간은 제도에 대항하여 간교하게 사리를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간혹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인

경제모형은 이를 꼭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지능력에서도 한계가 있어서 전면적 최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최선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사회인은 행동동기로서는 조직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며 인지능력으로서는 완전한 집단적 합리성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회인들은 홀로 있는 것보다는 모여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집단을 이루겠다는 일종의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조직에 공헌하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한다.⁴⁰⁾ 여기서의 합리성은 위에서 말한 개인주의적 합리성과는 다르나 인간의 인지능력에 최고수준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합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신뢰와 선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이상적인 협조를 내포하고 있는 사회 즉 고상한 사회 (**high-minded society**)를 만들 수 있으며 유토피아적인 경제조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이 되고 시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집단적 목표에 헌신해야 하며 개별적 복종을 요구한다.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는 사회규범 원리와 자발적인 협조와 연대감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경제 제도가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⁴¹⁾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인식하면서도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스스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조직에 충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사회인 모형이 이러한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도 인간의 의식이나 행동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서 개인의 이기심과 사회의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지 않는데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도덕인은 행동동기로서는 이타심에 기반을 두지만 사회인과는 달리 사회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인지능력에 있어서는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합리성과는 구별된다. 철학이나 인류학 처럼 도덕인을 채택하는 학문 분야에서는 경제적 행동은 전적으로 도덕적 코드와 문화적 가치에 종속되어 있다고 해석한다(Wilk, p. 112). 여기서의 이기심과 개인주의적 합리성을 서구사회의 인종주의적인 가정(B. Malinowski)으로 해석하는 대

40) Wilk, op.cit., 1996, p. 74.

41) O. Williamson, op.cit., 1985, p. 52.

신, 문화는 감정(emotion)이나 습관을 통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상, 가치 그리고 의사결정 등은 문화의 산물(Franz Boas)이라는 것이다. Weber가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공통적인 심리과정에 기초한 합리성을 형성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문화가 규정하는 전통과 관습을 따른다는 현실로부터 도덕인이 형상화되었다.⁴²⁾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 도덕인을 모형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인은 행동동기로서는 기회주의를 추구하며 인지능력으로서는 제한적 합리성을 보유하는 존재이다. 계약인을 채택하는 신제도학과 경제학에서는 분석의 편의보다는 실천상의 현실성을 중시하므로 현실적인 선택 영역과 비현실적인 선택 영역의 구별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계약인은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며 다시 재생 및 처리하는 데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혼합계약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하다. 계약에 담겨진 내용이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지가 불명확하며,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하다. 계약인에 내포된 인간성은 시장(market), 혼합계약(hybrid), 위계구조(hierarchy) 등의 지배구조의 상대적인 효과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계약인은 보유하고 있는 우월한 정보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정된 규칙의 틀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경제인의 이기심과 다르다. 따라서 계약인을 상징하는 모형에서는 개인들로부터 신뢰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적 방법과 기회주의를 제거할 수 있는 사후적 안전장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VI. 한국인의 사회경제적 성격 분석

한국인, 경제적으로 누구인가. 즉 경제활동 뒤에 숨어 있는 행동동기가 무엇이며, 의사결정과 관련된 인지능력이 어떠한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인의 이념적 인간형을 구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

42) Wilk는 Malinowski, Boas, Weber 등의 생각을 종합하여 문화경제학(cultural economics)에 적합한 이념적 인간형인 도덕인(moral man)을 제안하였다. Wilk, op.cit., 1996, pp. 112-120 참조.

인의 성격을 추론하기로 하겠는데, 그 내용을 의사결정 단위, 의사소통 과정, 사회 관계를 규정하는 준칙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문제해결 방식 등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한국인의 의식구조(이규태, 1977),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최봉영, 1994), 일상생활에서 한국인의 사고방식(민문홍, 1996) 등에서 나타난 특성을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유추하기로 한다.

1. 의사결정의 기본 단위로서의 가족

역사적으로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족은 개인에 우선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효를 만행의 근본으로 여기는 유교적 원리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으며 오늘날까지 한국사회의 근본적 이념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은 가족 구성원중의 역할로서 식별되어 개체로서의 행동 단위는 소멸되고⁴³⁾, 개인의 자아실현은 가족의 이익이나 가문의 명예 증진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⁴⁴⁾

한국인은 직장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자아의 실현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명예 혹은 가정의 복지를 고려한다. 물론 그들이 가족회의 등을 통해 가족의 의사를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혼자서 독선적으로 결정할 때에도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가족의 만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일자리가 주어질 때에도 가기 싫지만 가족의 복지를 위해서라는 명분이 충족되면 한국인은 기꺼이 가는 것이다.⁴⁵⁾ 아무리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에서라도 누이는 남동생을 위해 결혼을 미루면서까지 일을

43)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상)』, 문리사(1977) 357~358쪽은 한국인이 활동하는 장을 4층 구조로 인식하고 제1인간층을 가족으로 보면서 ‘나’라는 개체는 그 속에 소멸되어 의존성을 보인다는 점을 제시했다. 공용으로 설계된 집구조와 상호 의존성을 보이는 생활 패턴에서 볼 때 개인주의적 요소가 자랄 수 없다고 하였다.

44) 최봉영,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1)』, 느티나무(1994), 2장은 개인적 자아실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적 자가(自家)실현을 도입하고 그 실현된 결과를 입신양명으로 규정한 바 있다.

45) 개인주의에 입각한 서양인은 가족회의를 거치거나 배우자와 면밀히 상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만족이나 취향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경우와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의 구성원들도 개개인의 취향에 따른 의사결정을 인정하면서 격려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인의 의사결정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며 어머니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 직장에서 헌신을 다한다.

뿐만 아니라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라든가 가족이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현재의 고통을 참는다. 정통적 경제이론에서는 현재의 저축은 미래의 높은 소비를 위한다는 것이다. 물론 미래의 소비는 자신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보인 한국인의 높은 저축률은 이러한 경제이론에 의해 설명되기보다는 바로 가족 중시의 사상에 의해 잘 설명된다. 1991년도 도시가구의 저축목적을 보면 자녀교육비 마련이 응답자의 31.4%, 주택마련이 27.7%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의 이기심을 반영하는 노후대책 마련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⁴⁶⁾ 가족 중시 사상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말은 “한국인은 나라를 위해서는 죽을 수 없어도 집이나 가문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수 있다”이다. 그래서 국가의 이익과 가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할 때 대부분의 한국인은 가문의 이익을 선택하였다. 부정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사례이지만 한국인들이 동반자살의 이유로 ‘애비 없이 거지꼴로 사느니 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 혹은 ‘내가 낳은 자식이니 내가 마음대로 한다’를 내세우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⁴⁷⁾

한국인의 가족 중시 사상은 직장생활 나아가 사회생활에서의 집단 의식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그 조직 내에서는 매사를 자신의 가족과 결부시킨다. 한국인에게 집이나 가족이 숙명적인 공동체이듯이 개개인은 직장을 자신의 사회적 존재의 전부로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직장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에 동일화하려 한다. 경영자와 노동자는 일을 매개로 한 계약관계이기 보다는 사람과 사람의 인연에 의한 숙명적 관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⁴⁸⁾ 그래서 한국의 기업은 피고용인에 대해 전인적인 배려를 하고 피고용인은 회사를 제2의 가정으로 생각하고 전력투구한다. 한국인은 신뢰할 만한 지도자나 동료에게 자신의 개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신상의 문제를 상의하고 그 해결을 의뢰한다. 따라서 직장 사회에서 가족의식에 기초한 집단 의식이 성공적으로 발현되면 한국인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는 지난 40여 년간 한국경제가 이룩한 고도성장으로 나타났다.

46) 한국은행, 『도시가구저축시장조사』(1991) 참조.

47) 이규태, 앞의 글, 246쪽.

48) 이에 비해 서양인은 자신의 자격과 기능과 노동시간으로 계산된 일정한 노동량을 고용주와 계약 하고서 회사의 구성원이 되므로 회사의 능력은 구성원들의 능력의 총합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앞의 주, 234~261쪽 참조.

종업원의 집단 의식 유발여부는 기업의 경영에 천양지차의 영향을 발휘한다. 그 집단 의식은 조직의 구성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에 있으며 이 집단 의식의 유발이야말로 한국적 경영의 요체가 되었다. 즉 집단 의식이 잘 촉발되어 관리된 집단에서는 그 집단의 쇠퇴나 파산은 자신의 쇠퇴나 파산이 되기에 서양 사람처럼 계약된 보수에 어긋난다 하여 또 계약된 업무량이 많아졌다 하여 불평하는 법이 없다.⁴⁹⁾ 그래서 한국인의 집단 의식은 생산적 핵에너지일 수도 있고 파괴적 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인의 가족 의식은 기업의 지배구조, 소유구조, 그리고 경영방식 등에 잘 나타난다. 재벌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중소기업에도 널리 퍼져 있다. 소유주 중심의 경영체제, 장자우대의 불균등 상속, 가부장적인 노사관계 등을 한국기업의 경영적 특성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력관리 방식에서도 교육이나 인력 계발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데 기업은 이러한 비용지출을 가족 의식의 발로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⁵⁰⁾

이상으로부터 한국인의 경제적 성격에 관한 두 가지 특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한국인은 가족을 분석 단위로 하면 이기심을,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면 이타심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을 기초로 한다는 면에서 이기심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족의 이익과 밀접히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기심이 그대로 전달된다. 이 경우 조직이 잘 되면 가족에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 최선을 다하면 이러한 현상을 이기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이 보이는 이기심은 개인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의 이기심과 다르며 일본의 집단주의적 성향과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한국인은 공사(公私) 구분에서 매우 애매하다.⁵¹⁾ 가족이라는 집체에서 익숙해진 개인은 직장이나 단체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 새로운 집체를 확대된 가

49) 앞의 주, 130~137쪽.

50) 유교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교육열이 현재의 산업화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과정은 전택수,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보인 전통문화의 역할』, 107~108쪽을 참조하기 바람.

51) 이규태, 앞의 책, 375~376쪽.

정(extended family)으로 생각한다. 주어진 업무와 무관한 일을 기꺼이 할 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이용하여 사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공생활을 사생활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근무시간을 벗어나서도 구성원 사이에 공적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경우 구성원들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가족의 이익을 위한 개인적 행동이 집단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단을 위한 공적 행동과 잘 구분되지 않는다.⁵²⁾

셋째, 현대 한국인은 인센티브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가족을 자신보다 더 중시하기 때문에 가족의 명예와 관계되는 일이라면 한국인은 단순한 이기심을 능가하는 이욕심(利慾心)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국인은 각종 부정부패와 개인적 일탈 행위의 원인을 교육비 마련이나 가문의 세력 증진과 관련시킨다.

2. 의사소통에서의 은밀성과 복잡성

한국인은 사고(思考)를 표현하거나 대화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은밀하고 간접적이며 복잡하다. 매사에 단순하지 않고 복잡적으로 때로는 복선을 깔고 우회적으로 표현한다.⁵³⁾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의중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그럴 듯한 명분을 따라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 명분 속에 숨겨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떠한 문제를 두리 뭉실하게 복잡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회의석상이나 논의의 자리에서 한국인은 자신의 생각과 구체적인 목표를 분명히 딱 부러지게 표현하지 않는다. 아마 이는 그렇게 해야 뉘탈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중을 살피고 자신과의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부수 효과를 기대하는지도 모른다.⁵⁴⁾

52) Chang and Chang, *The Korean Management System*, Westport, Greenwood Publishing Group, Inc, 1994, p. 46 참조

53) 민문홍, 「한국인의 사고방식」, 일상문화연구회(편), 『한국인의 일상문화』, 한울(1996), 112~114쪽의 ‘은밀하고 복잡한 의사소통 방식’과 이규태, 앞의 책, 140~196쪽의 ‘은폐의식’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이규태는 이러한 경향을 은폐의식이라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실례를 제시하고 있다. 창문 앞에 발을 설치함으로써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부인네들이 자기 살림을 내보이기 싫어하면서 남의 집 부엌 안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싶은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자신의 무력이나 단점 혹은 실수를 솔직히 노출시키는 정치가, 경제인, 예술인 혹은 학자들을 찾아 보기 힘든 현상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자신의 실책이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도 반드시 자기 밖에서 그 원인을 끌어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조상이 못나서, 친구 때문에, 아니면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고 둘러댄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이를 동정 어린 시각으로 인정하고 측은하게 받아들인다. 그 결과 나타난 결과에 대해 자발적으로 승복을 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불만스러운 일을 당할 경우 이를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안으로 음습한 음지에서 그것을 발효시키다가 전혀 무관계한 일로 어느 날 갑자기 발끈하여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즉 단점을 은폐하다가 자학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화장실에 자기 집에 불지르는 행동이나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불태우고 화장실에 서방질한다”는 속담은 이러한 한국인의 의식을 갈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⁵⁾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한국인의 경제적 성격과 관련되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한국인이 정보를 독점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표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 전달에 있어서 그 전달 수단의 회로를 극소화하고 또 애매하게 한다. 자기의 체험, 의사, 그리고 주관적 견해를 가급적 남에게 표현하지 않도록 억제한다. 그 결과 자신의 의사가 타인에게 왜곡되어 전달되며 또한 그는 이런 왜곡을 의도적으로 방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로는 한국인에게는 체계적인 사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어떤 경제 문제를 직면하고서도 원인과 과정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결과 등에 신중히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잘못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고 결과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향으

54) 이러한 이유를 민문홍, 앞의 책 113~114쪽은 은유와 상징을 추구하는 유교적 문화의 특성과 정치·사회적으로 혼란했던 한국의 역사적 배경에서 찾고 있다.

55) 이규태, 앞의 책, 187~193쪽.

로부터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하급에 있을 때에는 상급과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일단 상급에 도달하면 하급과는 다르다는 서열의식을 갖게 되는 경향도 체계적 사유의 부족의 한 단편이라 말 할 수 있다.

3. 준칙에 대한 인식에서의 추상성

한국인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반 활동을 다스리는 질서 원리로 법보다는 도덕을 중시하여 왔다. 그리고 규칙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도덕적인 용어를 많이 포함하여 추상화시켰다. 헌법이나 법조문에 나타나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은 금지한다 혹은 무효로 한다”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들은 한국사회의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이며 아주 오랜 전통의 하나이다. 지도자는 그의 국정 수행 능력보다는 자신을 비롯한 일가의 도덕성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예사이며, 또한 주어진 규정이나 법보다는 자신의 명령에 따라 국가를 다스린다. 비슷한 현상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발견된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법규보다는 애매하고 측정불가능하며 항상 변경 가능한 명령을 선호한다. 형식적이고 구체적인 법보다는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 외부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⁵⁶⁾

일상생활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을 경시하는 풍조로 발전하였다. 그 내용은 법의 준수와 법의 집행으로 나누어 짚어 볼 수 있을 것인데, 법이 얼마나 지켜지지 않는 지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와 ‘법을 지키면 손해이다’에서 잘 보여준다. 그리고 법의 집행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은 ‘법이면 다냐’라는 말로 대표되고, 법에 대한 우리의 혼돈된 사고는 ‘우리 사회를 육법전서에 맡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무질서를 도덕성의 타락으로 몰아 붙이면서 도덕성의 회복으로 해결하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문화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생각

56) 이러한 특성은 경제조직의 운영을 규정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전택수, 앞의 책, 106~107쪽 참조.

할 수 있다. 사회의 지도자는 모름지기 군자가 되어야 하며,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인 義를 필히 갖추어야 했다. 그래서 의를 갖춘 이는 대소간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利의 발생 여부를 고려하는 현실보다는 義라는 명분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명분은 사람의 행동에 도덕적인 당위성을 부여하며 사회질서를 확립시켜 주는 규범으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정신과 도덕이라는 이상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맹자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법을 경시하는 풍조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발생한 정치·사회적인 격변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일제 시대부터 연속된 사회변동에 의해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 항거하는 것 자체를 애국심의 발로로 간주하고서 그 구체적인 실천 행위는 법을 무시하는 것이었으며 해방후의 권위주의적 개발 독재시대에서는 법을 어기는 것을 민주투사의 본분으로 인식하였다. 국민의 동의를 얻어 각종 법규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합리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이를 존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련 기관이 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스스로 법을 무시한 사례도 빈번한 데 이 또한 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한국인의 경제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인은 준칙에 대해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중성을 보임으로써 기회주의적인 경향을 갖게 되었다. 정신이나 도덕이 의미하는 바처럼 여기의 구성원들은 추상적이고 엄밀하지 못하고 각자의 도덕 수준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불완전하기 마련인 제도를 악용하고 일 처리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적당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기 쉽다.

둘째, 한국인은 권술을 통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즉 상대방을 자기 중심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타인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홀로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믿는다. 그리고 법의 집행자도 철저하지 못하여 구성원들이 법이나 규정을 위배해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구성원들은 법집행자들이 먼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생각한다.

4. 문제해결에서의 감정주의

한국인은 논리적이어서 할 경제활동에 있어서 경제문제 해결을 감정이나 정에 의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해결 방식을 감정주의 (emotionalism)이라 부를 수 있다. 한국인은 어떤 문제를 봉착하면 머리 속에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다가 실제 행동에서는 감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일수이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정이 서로의 관계성을 규정짓는 척도로 작용하여 애증, 호불호, 친소 등의 이분법적 판단으로 인도한다. 정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것이 사회의 집단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각종 형태의 연계관계를 이루어주는 끈이 되고 나아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과 감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에서는 법과 규정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정면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인간관계로 풀어가려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⁵⁷⁾ 원칙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예외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실제로 원칙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들면 더 많은 개인적 비용을 지불하게 됨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더욱 감정과 정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미친 듯이 몰입하고 싶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성의 제한적 사고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엄청난 위험적 요소와 독소를 지니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산적 사고를 벗어나는 심령적 초능력을 보일 수 있다.⁵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단 싫어하는 사람의 어떤 행실도 배척하는 상극논리로 빠지기도 한다.

계통발생적인 관점에서 한국인의 심정주의는 기본적으로는 무속적인 기질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⁵⁹⁾ 이 무속적인 기질은 오랜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신바람으로, 때로는 한풀이의 파토스로 나타났다.

이상의 일상적인 행동으로부터 현대 한국인의 경제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57) 최봉영, 앞의 책, 제6장.

58) 김형효, 외 4인, 『한국문화의 진단과 21세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4), 66쪽.

59) 필자, 앞의 책은 21세기 한국경제의 모습을 확립하려는 시도에서 무속적인 신바람 기질이 현대 한국인의 정신에 전승 및 유전되어 오는 과정을 개술한 바 있고, 김형효, 외 4인, 앞의 책, 62~67쪽은 신바람 기질의 역사적인 과정을 상술하였으므로, 이것들을 참고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인은 의사결정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게 된다. 한국인에게 정의 기초가 되는 마음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정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진다. 마음의 쓰임이 모든 것을 좌우하므로 인정주의, 온정주의, 정실주의, 정치주의 등의 표현을 듣게 된다.⁶⁰⁾

둘째, 경제활동을 규정하는 규칙의 준수를 경시한다. 이는 일관성의 결여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인은 외부에서 주어지 있는 객관적 규정보다는 내부에서 항상 변하는 주관적 기준을 따른다.

셋째, 경제활동에서 타협보다는 극단적인 해결을 선호한다. 이는 이분법적 사고, 선악적 구분의 경제적 함의가 되겠지만 경제분석에서의 구석해(*corner solution*)가 빈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VII. 새로운 한국경제 분석모형 모색

한국경제에 적합한 분석모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전개된 한국인의 사회경제적 성격으로부터 유추한 특성을 다시 정리하여 한국인의 경제적 행동동기와 인지능력의 두 측면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경제분석 모형이 확립되려면 분석의 기본단위에 대한 일정한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인의 행동동기를 정리하기로 한다. 한국인의 이기심은 가족을 의사결정의 기본단위로 하는 형태임을 보았다. 특히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적 풍토 때문에 가족의 이익을 위한 인센티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면서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는 가족의 이익과 연결되면 최선을 다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조직을 위하는 것이 사회인모형에서 보이는 이타심의 발휘와는 다르다. 즉 사회의 이익을 가족의 이익 보다 우선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도덕을 중시하는 유교문화적 이념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높은 도덕을 추구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도덕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산업사회에 들면서 가족적 이기심과 도덕적 이타심과의 혼돈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60) 최봉영, 앞의 책, 232쪽.

한편, 가족중시 풍조로 인해 한국인은 개인적으로 직장이나 단체의 일원이 되었을 때 공적인 기능을 사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공생활을 사생활의 연장으로 생각하고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적인 회생을 감수하기도 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에서의 은밀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정보의 독점과 정보의 왜곡을 의도적으로 방조한다. 의사소통의 은밀성과 애매성으로부터 한국인은 준칙을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기회주의적 속성을 빈번히 나타냈으며 권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였다. 그리고 정이나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으로부터는 규칙을 경시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한국인의 경제적 행동동기는 경제인의 합리적 이기심, 사회심, 도덕심보다는 계약인의 속성인 기회주의적 성향에 근접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인의 인지능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불명확한 의사소통에 익숙한 결과 원인과 예상되는 결과를 체계적으로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특히 정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문제해결 방식을 선호한 결과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결하고 타협보다는 극단적인 해결을 선호하고 많은 경우에는 사회적 관습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개인적 합리성을 규정하는 몇 가지 특성인 계산성, 논리성, 체계성, 보편성 등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인은 경제인의 속성인 개인적 합리성보다는 계약인의 속성인 제한적 합리성의 성향 아니면 유기체적 합리성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처럼 행동동기와 인지능력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의 경제적 특성은 적어도 시장경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미국인에 비해서 이념형으로서의 경제인 속성과 거리가 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급속한 경제 변화의 영향을 받아 한국인의 경제적 성격은 급속하게 변하여 왔다. 그리고 주류경제학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기규칙의 준수 나아가 제도의 고정성 등은 한국의 경제 환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따라서 미국의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파류의 소비자 행동이론, 기업이론, 그리고 경제정책론 등은 한국경제를 분석하는데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데에도 불충분할 것이다⁶¹⁾.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은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는 신제도학과 경제학, 진화론적 경제학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의 인접 학문과의 교류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경제발전은 국민소득이 증대하면서 그 구성 및 경제제도가 고도화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국민소득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그리고 순수출로 구성된다. 소비는 소비자가, 투자는 기업이, 그리고 정부지출은 정부정책이 결정한다⁶²⁾.

먼저 새로운 소비자 행동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자. 한국인의 소비 행태나 저축성향은 주류경제학에서 밝히는 것과 매우 다르면서 급격히 변하여 왔다. 주류경제학에서는 개인의 소비는 서로 독립적이면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본다.⁶³⁾ 즉 소비의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인은 베블렌이 말하는 과시형대의 소비경향을 어느 나라보다도 명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의식주의 일상생활 용품에 대한 소비에서부터 사치재에 이르기까지 모방 소비가 보편적이다. 그래서 중류층은 상류층의 소비 품목을 소비하면 자신들의 효용이 더 높아지고, 상류층은 효용의 감소를 느끼게 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소비의 외부성이 존재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한국인의 저축성향도 주류경제학에서 추정하는 것과 대단히 다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도시가구의 저축 이유는 대부분이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저축이 소득과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회지표, 2002>에 있는 1999년의 통계에 의하면 도시 가계의 저축 이유로 자신의 노후에 대한 대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그리 높지는 않은 편이다. 이상의 현상은 개인의 선호가 변하고

61) 물론 주류경제학 이론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형태의 경제이론이라도 이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신 주류경제학 이론이 절대적이지 않고 수정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필자는 한국인의 전통문화가 경제주체별과 경제주체간의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고려한 새로운 모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람.

62) 순수출은 수출·수입으로 정의되면서 수출은 외국의 경제적 조건에 의해 수입은 국내의 경제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주류경제학 이론의 일부이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경제에서는 수출 역시 목표변수로 간주되어 국내의 경제정책의 영향하에 놓여있었다. 그래서 순수출 역시 경제정책의 역할에 대한 설명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다.

63) P. Krugman, "What Economists Can Learn from Evolutionary Theorists", <http://web.mit.edu/krugman/www/evolute.html>(1996)의 다음 지적이 잘 말해 준다. "Economics is about what individuals do: no class, not correlations of forces, but individual actors. ...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is of the essence."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경제학계는 이러한 경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이 경향을 반영한 소비자행동이론의 모형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있다. 반면 외국에서는 인류학과 사회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특히 개인의 기호의 가변성을 중시하는 많은 연구에 대한 개관이 DiMaggio(1994)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한편, 경제학적으로 볼 때에 한국인의 경제적 성격은 신제도학파가 가정하는 계약인에 근접하므로 신제도학파적 모형에서 찾아야 하나 불행히도 신제도학과 경제학은 소비자 행동이론을 충분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지만 과거의 경로 과정을 중시하는 진화론적 경제학에서는 소비자행동이론에 대한 모형화가 시작되고 있다. Cowan, R., W. Cowan, and P. Swan(1997, 1998)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P. Bourdieu(1984)의 사회계급의 집단화(groupings of social class) 개념에 기초하여 소비의 외부성과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모형을 정립하여 소비자들이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소비 행태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J. Metcalfe(2001)는 소비와 선호의 관계를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소득의 제약과 시간의 중요성을 보이고, 점진적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소비에 대한 행동이론적 접근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한국인에 적합한 소비자행동이론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무비관적으로 모방할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성향과 사회적 특성을 연구하는 인류학과 사회학의 연구 결과를 수용하면 한 차원 높은 소비자행동이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한국기업 특히 재벌과 중소기업의 행태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기로 한다. 우선 한국에서의 지배적인 산업구조는 소위 재벌이라 불리어지는 대규모이면서 수직적으로 계열화된 기업집단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1999년말의 30대 기업집단은 총계열사추가 686개이면서 자산총액은 전체의 57.6%, 매출총액은 전체의 68.2%를 점유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00). 이들 계열사를 통제하고 있는 주체는 중앙의 지주회사로서 한 사람의 오너 혹은 그 가족의 소유 아래 놓여 있다. 그러면서 이 지주회사는 국가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 주거래은행의 영향 아래 놓여 있으므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러면서 재벌의 네트워크는 비관련 다각화를 취하는데,

이는 서구의 경향과 상반된다.⁶⁴⁾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특정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은 전문화를 추구해야 하나, 대부분은 생산방식이나 운영에서 대기업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신고전과 경제학의 기업이론이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신고전과 경제학은 기업을 생산함수로 간주하고서는 투자 활동에 대한 연구에 그치고, 그 구성원들의 경제적 성격을 담고있는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기업에 대한 연구를 등한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미의 경제학계도 신고전과 경제학에서는 기업이론이 많이 연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기업이론 모형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은 W. Coase(1937)의 거래비용 개념에 기초한 신제도학파의 기업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정보와 계약의 불완전성 때문에 기회주의적 행동이 빈발하고, 이에 따라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기업은 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활동을 내부화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 이 이론은 문화와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게 되므로 한국적 특수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이론이라 하겠지만, 내부화할 수 없는 거래비용의 원천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⁶⁵⁾

North(1991)는 제도의 미비 특히 사유재산권제도의 미비가 거래비용을 높이고 결국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거래비용의 원천은 제도를 도입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의 미흡, 문화, 가치, 관습 및 관행 등의 특수성 등이므로 이는 기업이 내부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기업활동의 환경이다. 기업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고 생물학적으로 선택하면서 경로 의존적으로 발전한다는 이론 즉 진화론적 기업이론이 출현하고 있다. 이 이론은 Penrose(1952)을 필두로 하여 Winter(1964)를 거치면서 정립되었다. 그 이후 Nelson and

64) 한국재벌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으며, 그 중에서 강명현, 『재벌과 한국경제』, 나남출판사(1996)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65) 신제도학과 기업이론은 Coase(1937)의 거래비용 개념에 기초하여 Alchian and Demsetz(1972), Williamson(1975, 1985, 1996), Holmstrom and Tirole(1987), Grossman and Hart(1983)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이와 관련되는 참고문헌은 유동운, 『경제진화론』, 선학사(2000); 좌승희, 『진화론적 재벌론』, 진화론적 재벌론, 비봉출판사(2001) 등에 잘 정리되어 있다.

Winter(1982)는 기업의 일상적인 체질을 생물학적인 DNA로 간주하고서, 여기에 선택이 축적되어진다고 주장하였다.⁶⁶⁾

이러한 진화론적 이론을 한국기업의 활동을 설명하는 데 적용한 포괄적인 시도로 좌승희(1998, 2001)를 들 수 있다. 좌승희(1998)는 한국의 재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의 주어진 한국적 환경 속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진화해 온 기업조직임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기초로 정부는 기업의 내생변수의 결정과정에 개입해서는 안되고 외생변수인 경제여건을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좌승희(2001)는 금융제도가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의 외생변수로서 기업 지배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금융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므로, 한국의 경제학계는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정치한 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모형을 논의하기로 한다. 한국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규정하는 것처럼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수준을 훨씬 넘는다. 정부는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불완전한 자료, 불완전한 모델, 그리고 불완전한 의사결정 등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바람직한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이룩한 성과는 경제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다.⁶⁷⁾ 정부기업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절대적인 지배자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였다.⁶⁸⁾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한국 사회에 팽배한 제한적 합리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정부는 수출

66) 진화론적 시각을 경제현상에 도입한 시도는 Alchian(1950)과 Friedman(1953) 등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 와서는 Hayek(1988)은 시장질서의 진보를 문화진화론적 시각에서 설명하였다. 이상에 대한 발전과정과 참고문헌은 Dosi and Nelson(1994), Hodgson(1995), 그리고 유동운(2001)에 잘 정리되어 있다.

67) World Bank(1993)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8개국의 경제적 성과를 경제기적이라 부르면서 경제정책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Lucas, "Making a Miracle," *Econometrica*, vol. 61(1993)의 다음 지적도 경제기적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더욱 더해준다: "I do not think it is in any way an exaggeration to refer to this continuing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as an miracle."

68) P. Evans, *Embedded Aut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에 의하면 실증적인 결과는 지나치게 우월적인 정부가 오히려 기업으로부터 뇌물 등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에 얽매어 기업에게 종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일주의에 따르는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와 수입억제를 통한 불평 속에서도 국민들의 순응과 참여를 유도하였다.⁶⁹⁾

그 동안의 한국경제의 경험을 수량적 정책에 의존하는 신고전과 주류경제이론으로는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대신 한국경제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므로, 바람직한 경제정책 이론은 수단과 목표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동안의 높은 성과를 초래한 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제도의 변화에 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은 다행히도 신제도학과 경제학에서는 구조개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소개되고 있으므로, 이를 한국경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⁷⁰⁾ 관련 연구로서 참고할 만한 것은 North(1991, 1994), Okruch(2001) 등이 있고, 국내 연구로서는 금융발전 비전을 제시한 최승희(2001)가 있다. 이에 더하여 역사의 역할을 중시하고, 구조와 과정의 경로를 중시하는 진화론적 경제정책론은 Eggertsson(1998)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의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한국경제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좋은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VIII. 결론

본 논문은 한국인의 경제적 성격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기적으로 불리어지는 한국경제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대안적 경제학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삼았다. 본 논문을 통해 발견된 몇 가지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류경제학인 신고전과 경제학은 인간의 행동동기로서는 사리추구(pursuit of self-interest)를, 그리고 인지능력으로는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가정하는 데에서

69) 자세한 과정과 내용은 전택수, 앞의 책을 참조할 수 있다.

70) 수량정책(quantitative policy)은 주어진 제도에서 상대가격을 변화시킴으로서 경제주체의 행동을 바람직한 수준 및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구조개혁정책(structural policy)은 근본적인 경제시스템, 제도 등을 변화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Eggertsson, "Rethinking the Theory of Economic Policy: Some Implications of the New Institutionalism(1998)", <http://www.nap.edu/readingroom/books/transform/ch2.htm> 참조.

출발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실제의 인간은 때로는 법을 위배하면서 사리를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이며, 인지능력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리적임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정에 입각한 인간형은 계약인이라 불리며, 신제도학과 경제학에서 채택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한국인의 경제적 성격으로는 가족을 의사결정의 기본 단위로 간주하고, 의사소통에서는 은밀성과 복잡성을, 준칙에 대한 인식에서는 추상성을 보이고, 문체해결에서는 감성주의에 의존함을 밝혔다. 이러한 특성을 행동가정에 비추어보면 한국인은 신고전파적인 경제인보다는 신제도학파가 상정하는 계약인에 가까웠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발견된 한국인의 경제적 성격을 고려하면, 한국경제의 소비활동, 기업활동, 그리고 경제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서 문화와 역사의 중요성을 내포하는 신제도학파나 진화론적 경제학 이론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발견 및 주장은 정부가 추구할 개혁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의 한국경제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실재하는 한국인의 성격과 바람직한 한국인의 성격을 구분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개방화, 세계주의 등의 풍조로 인하여 사상적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화 혹은 세계주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에서 무엇을 바꾸어야만 하고 실재를 바꿀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즉 최적성(optimality)이 아니고 개선가능성(remediability)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현재의 경제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미래의 바람직한 한국인을 상정해서는 아니 된다. 미래의 바람직한 인간성은 구성원간의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적 시장질서 하에서도 가정가치와 위계질서가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회주의적 속성과 제한된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경쟁과 지배구조 모두가 효율적인 계약 형태가 될 수 있다.⁷¹⁾ 그러나 경제구조가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 거래되는 자산의 형태가 특수하게 되고 이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투자의 형

태도 역시 특수하여 경쟁적인 계약은 비효율적이게 된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오히려 기업의 수직적 계열화처럼 위계질서가 거래비용을 내부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Fukuyama(1995)는 한국이 저신뢰사회(low-trust society)라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Pollak(1985)이 지적한 것처럼 저신뢰사회에서 그리고 단순한 기술을 다루는 한국경제의 일부에서는 가족기업 혹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71) O. Williamson, op.cit., 1985, p.31 참조.

참고문헌

<국문>

- 강명현, 『재벌과 한국경제』, 나남출판사, 1996.
- 권태일, 『아담 스미스의 윤리 및 경제사상체계에 관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공정거래위원회, 「2000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2000년 4월 17일 보도자료.
- 김형효 외 4인, 『한국문화의 진단과 21세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민문홍, 「한국인의 사고방식」, 일상문화연구회(편), 『한국인의 일상문화』, 한울, 1996.
- 민대홍, 『비합리적 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유동운, 『경제진화론』, 선학사, 2000.
-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상)』, 문리사, 1977.
- 전택수, 『한국의 국공채와 국민소득의 장기적 관계에 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집, 1998.
- 전택수,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보인 전통문화의 역할』, 경제학연구 제46집 제2호, 한국경제학회, 1998.
- 전택수, 『경제발전과 문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 전택수, 「21세기 한국경제와 전통문화의 역할」, 한국문화경제학회 발표 논문, 1998.
- 정운찬, 『거시경제이론』, 다산출판사, 1991.
- 조용찬, 『Max Weber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최승희, 『진화론적 재벌론』 진화론적 재벌론, 비봉출판사, 1998.
- 최승희, 「기업이론과 기업·금융발전 비전」, 제도경제연구회 발표논문, 2001.
- 최봉영,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1)』, 느티나무, 1994.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2.
- 한국은행, 『도시가구저축시장조사』, 1991.

<영문>

- Alchian, Armen A., "Uncertainty, Evolution, and Economic Theo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June 1950.
- Alchian, Armen A. and Harold Demsetz,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Dec. 1972.
- Becker, G. S., "Nobel Lecture: The Economic Way of Looking at Behavior," *Journal of*

- Political Economics, June 1993, 101, pp. 385-409.
- Bourdieu, P.,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London, Routledge, 1984.
- Buchanan, James M., *Ethics and Economic Progress*,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4.
- Chang and Chang, *The Korean Management System*, Westport, Greenwood Publishing Group, Inc., 1994.
- Coase. R. H.,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vol. 4, 1937.
- Conlisk, John, "Why Bounded Rationa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4, June 1996, pp. 669-700.
- Cowan, R., W. Cowan and P. Swann, "A Model of Demand with Interactions among Consum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5, 1997.
- _____, "Waves in Consumption with Interdependence among Consumers", Working Paper #2/98-011, MERIT Maastricht Univeristy, 1998.
- DiMaggio, P., "Culture and Economy," in Smelser and Swedberg (eds), *The Handbook of Economic Sociolog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Dosi, Giovanni and Richard, Nelson, "An Introduction to Evolutionary Theories in Economics,"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1994, 4, 153-72.
- Eggertsson, T., "Rethinking the Theory of Economic Policy: Some Implications of the New Institutionalism, 1998, <http://www.nap.edu/readingroom/books/transform/ch2.htm>.
- Evans, P., *Embedded Aut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Friedman, M.,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 Fukuyama, Francis, *Trust*, New York, Free Press, 1995.
- Golman, Daniel, *Emotional Intelligence*(1995), 황태호(역), 감성지능(하), 비전코리아, 1996. 211-222쪽.
- Granovetter, M. and R. Swedberg, *The Sociology of Economic Life*,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1992.
- Grossman, Sanford F. and Oliver D. Hart, "An Analysis of the Principal-Agent Problem", *Econometrica*, 1983.
- Hayek, Friedrich A., "The Fatal Conceit," in Bartley, William W. (ed.), *The Errors of Socialism. The Collected Works of Friedrich August Hayek*, Routledge, 1988.
- Hodgson, Geoffrey, "The Return of Institutional Economics," in Smelser and Swedberg (eds),

- The Handbook of Economic Sociolog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_____, "Biological and physical metaphors in economics," in Maason, S., Mendelsohn, E. and Weingart, P. (eds), *Biology as Society, Society as Biology: Metaphors*, Dordrecht, Kluwer, 1995.
- Holmstrom, Bengt, and J. Tirole, "The Theory of Firm," in Schmalensee, R and Willing, R. (eds), *Handbook of Industrial Organization*, 1987.
- Jackson, W. A., "Cultural Materialism and Institutional Economics," *Review of Social Economy* Vol. 5, No. 2, Summer, 1996.
- Kahn, H., *World Economic Development*, Westview Press, 1979.
- Krause, Lawrence, "Korea: Fifty Years of Macroeconomic Management, 1945-1995,"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Korean Economy, 1945-1995, KDI, 1995.
- Krugman, Paul, "What Economists Can Learn from Evolutionary Theorists", <http://web.mit.edu/krugman/www/evolute.html>, 1996.
- Lewis, W. A., *Theory of Economic Growth*, London, Allen and Unwin, 1955.
- Lipsey, Richard and Paul Courant, *Economics*, New York, Haper Collins Publishers Inc., 1995.
- Lucas, R., "Making a Miracle," *Econometrica*, vol. 61, March 1993.
- March, James, "Bounded Rationality, Ambiguity, and the Engineering of Choice", *Bell Journal of Economics*, 9, 1978, pp. 587-608.
- Maital, Shlomo, *Minds, Markets, and Money*, New York, Basic Books, Inc., 1982.
- Marshall, Alfred, *Principles of Economics*, Macmillan, 1969.
- Metcalfe, J. S., "Special Issue: Consumption, preferences, and the evolutionary agenda,"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11, 2001.
- Muller, Jerry, *Adam Smith in His Time and Ours*,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 Nelson, Richard R. and Sidney G. Winter,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North, D. C., "Institu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Winter, 1991.
- _____, "Economic Performance through Time,"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94.
- Okruch, Stefan, "Evolutionary Analysis of Economic Policy: Towards a Normative Theory," <http://www.mpp-rdg.mpg.de/okruch3.html> , 2001.
- Penrose, Edith T., "Biological Analogies in the Theory of the Firm," *American Economic Review*, 1952.

- Polanyi, Karl, (1957), "The Economy as Instituted Process," in M. Granovetter and R. Swedberg (eds), *The Sociology of Economic Life*,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1992.
- Pollak, "A Transaction Cost Approach to Families and Household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3, 1985, pp. 581-608.
- Rodrik, D., "Understanding Economic Policy Refor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March, 1996.
- Sen, Amartya, *On Ethics and Economic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1996.
- Simon, Herbert A., *Administrative Behavior*, New York, The Free Press, 1996.
- _____, "Human Nature in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9, 1985, 293-304.
- _____, "Theories of Bounded Rationality," in C. B. McGeove and R. Radner, (eds), *Decision and Organization*, North Holland, 1972.
- Smith A.,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Reprinted R. in H. Campbell and A. S. Skinner (eds), Oxford, Clarendon Press, 1776.
- Stigler, G., *Smith's Travel on the Ship of the State*, in Skinner and Wilson (eds), *Essays on Adam Smith*, Oxford, Clarendon Press, 1975.
- Tsukahara, Theodore, "Love, Filial Piety, and Economic Ration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Conference Paper*, 1996, draft.
- Vanverg, Victor, *Rules and Choice in Economics*, New York, Routledge, 1994.
- Wilk, Richard R., *Economics and Cultures*, Oxford, Westview Press, 1996.
- Williamson, Oliver, *The Mechanisms of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_____,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New York, The Free Press, 1985.
- _____,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A Study in the Economics of Internal Organization*, Free Press, 1975.
- Winter, Sindy G., "Economic 'Natural Selection' and Theory of the Firm," *Yale Economic Essays*, 4(1), 1964.
-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주제어

인간성, 제한적 합리성, 기회주의, 신제도학과, 진화론적 경제학